밑그림 나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호수공원·한전부지 면적 놓고 이견

국고보조금 1,200억원 확보 여부 성패 관건
10월부터 공사… 2012년까지 기반시설 완비

이번에 발표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은 17개 이전기관이 배치될 위치와 면적을 비롯 729만㎡(220만 평)에 이르는 공동혁신도시의 세부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앙호수 공원의 면적을 비롯 아직까지 관련기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몇몇 현안들은 다음달 15일에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어서, 소폭이나마 변동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남아있는 현안들**=혁신도시의 중앙에 위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중앙호수공원은 아직까지 조성면적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는 호수공원을 4만여 평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남도는 10만 평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측은 현재 일산지역의 예를 들어 10만 평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개 이전기관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전력의 부지면적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공사는 4만4천여 평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한전 측은 갑절이 훨씬 넘는 10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10만 평을 배정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 최대한 배정면적을 늘려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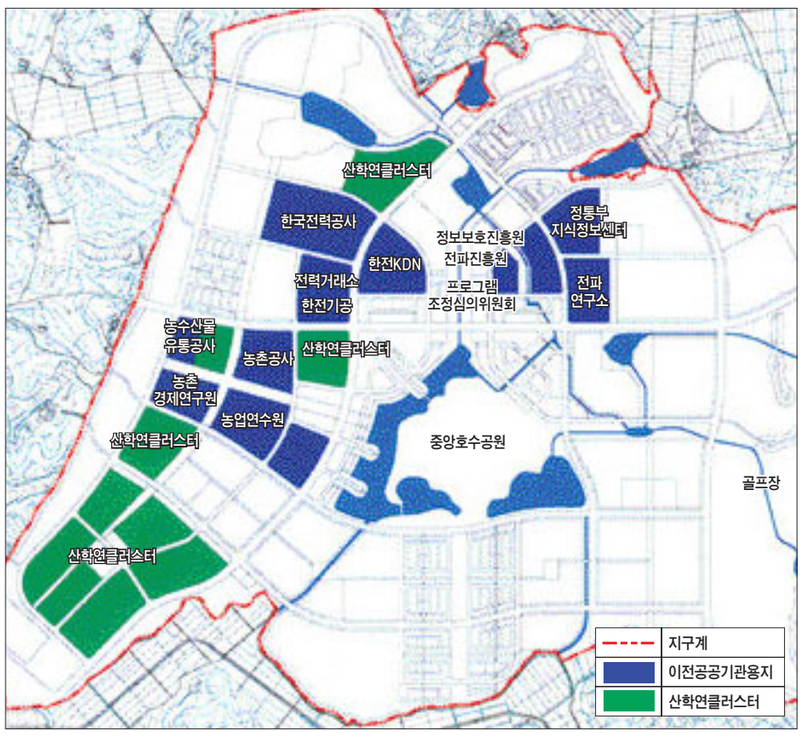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개 혁신도시 당 6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2개 지역이 공동으로 건설하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도 1천2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광주지역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사가 벌어지는 곳이 전남인 만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이 전남지역 업체만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측은 이와 관련 현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공동혁신도시에 한해 광주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일정**=전남도와 광주시, 토지공사는 오는 5월까지 건교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이어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늦어도 10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어 오는 2012년 220만 평의 공동혁신도시 부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모든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나주시는 토지공사로부터 '완성된' 혁신도시를 인수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등 이전대상 기관들도 내년 12월까지는 사옥과 기숙사 등의 시설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는 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정상 운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이전공공기관 배치계획(안)



단일지도체제 확정한 민주당 대표

장상이냐 박상천이냐

4월 3일 全大 단일체제 대표 경선
張-朴 2파전, 원내-원외 대결구도

민주당이 진통 끝에 오는 4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키로 결정, 장상 대표와 박상천 전 의원의 한판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민주당은 27일 중앙당에서 중앙위원회의를 갖고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 투표를 실시한 끝에 26대 5로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는 정계개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일지도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정계개편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하되 당 대표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의결기구를 구성하자는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의결기구 구성은 당헌 및 당규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대표 경선은 박상천 전 의원과 장상 대표의 2강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경재 전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상 대표는 현역 의원들과 한화갑 전 대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박상천 전 의원은 원외 인사들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원내와 원외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이 장상 대표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장 대표가 정계개편과 관련, 통합에 비교적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즉, 4선 의원을 거치며 법무장관, 원내총무 등 화려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깐깐한 성격의 박 전 의원보다는 사실상 정치 신인인 장 대표가 훨씬 편안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 대표를 영입한 한화갑 전 대표의 영향력도 이번 경선에 중요한 변수다. 비록 원내는 아니지만 당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표 경선은 한 전 대표와 박 전 의원의 대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원외 인사들은 박 전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는 장 대표보다는 박 전 의원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장 대표의 정치 경력으로 정계개편을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과 통합파 현역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심중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도 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 일단 범여권에서는 은근히 장상 체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박 전 의원이 당권을 쥘 경우, 정계개편 과정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1특별법 국회 상정은 됐지만

문광위, 특혜 논란·국고지원 타당성 등 지적…통과 험로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특별법안 검토과정에서 ▲대회운영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민간기업 운영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타당성 문제 등이 지적돼 원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고됐다.

이날 열린 국회 문광위는 F1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F1대회에 대한 국고지원 및 부지확보 등 국가 지원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특별법안이 상정됨으로써 본안 심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전남도의 F1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문광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F1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종현 문광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J프로젝트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F1대회 개최기반 마련에 따른 법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은 특별법안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인·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대회운영 및 관련 시설 활용계획 수립 권한 등을 전남지사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체간 권한 및 책임의 적절한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F1대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통해 대회를 유치 추진함으로써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F1대회 개최권료 및 부지매입은 전남도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민간기업이 부담한다는 협약을 감안할 때 대회 관련 시설사업 등을 위한 국고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27일 "기업을 위해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도민의 이익이 배제된 F1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비례) 등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360억원의 취소 불능 신용장 개설, 프로모터인 MBH에 대한 의혹, 대회 운영법인인 KAVO 부실에 대한 불량채권 인수 우려, 부지 확보 등 F1 대회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해결책 제시 없이 앞만 보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도는 F1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오는 7월 영암군 삼호읍 삼포·난전 일대 간척지 123만평에 경주장을 착공해 2009년 완공 후 2010년~2016년까지 매년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與 '19세 국민투표권 부여' 법안 발의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27일 6차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개헌 전 단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과 그간의 특위 논의를 종합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동일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투표운동 준비행위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